

# 건설동향브리핑

## 제502호 (2015. 3. 16)

### ■ 정책 · 이슈

- 건설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및 개선 과제
- 물산업,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

### ■ 경영 · 정보

- 최근 일본 SOC 시설물 정비 사업 동향

### ■ 경제 동향

- 1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8.3% 증가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민자사업 활성화, 두 가지 전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건설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및 개선 과제

- NCS, 건설인력 교육훈련 과정 적용 전 현실과리 부분 재검토되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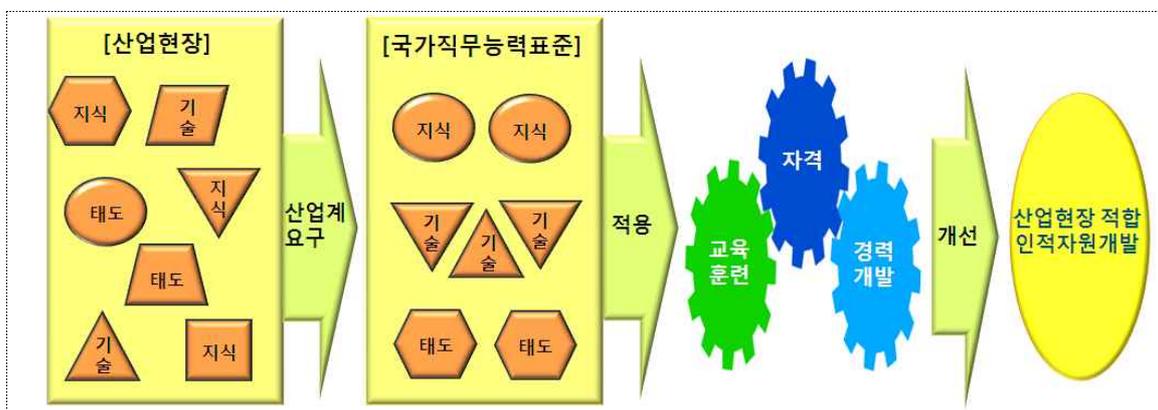
### ■ 2016년부터 직업훈련과정 편성에 전면 적용

-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개발, 보급하고자 함.
  -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조성’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2014년까지 1단계로 NCS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자격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 2016년부터는 모든 직업훈련 과정 편성에 NCS를 전면 적용할 계획임.

### ■ ‘지식·기술·태도’로 구성

-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
  - 지식(Knowledge)은 법규, 사실, 이론, 개념, 원리에 관한 사항이며, 기술(Skill)은 방법, 매체, 도구, 기구 등 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태도(Attitude)는 산업안전·위생·보건·환경보전 등 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도>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2014」

■ 건설 분야(대분류) NCS : 8개 중분류 · 24개 소분류 대상 개발

- NCS는 대분류(24개) → 중분류(77개) → 소분류(227개) → 세분류(857개)로 구성되는데, 건설산업 분야 분류 체계는 대분류(1개), 중분류(8개), 소분류(24개)로 이루어짐.
- 건설산업 분야 중분류에는 건설공사관리,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도시·교통, 건설기계운전·정비, 해양자원 등이 있음.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예시>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NCS 분류체계' 참조

■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는 타당...건설 부문 NCS 현장과 괴리되는 부분 많아

- 2014년 두 번째 버전으로 발표된 NCS의 경우 노동시장/교육훈련/자격 현황 분석,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임.
- 특히 중분류인 건설공사관리 및 건축의 경우 현실 괴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소분류 건축시공의 경우 13가지 세분류(건축목공시공,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타일석공시공, 건축도장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창호시공, 가설시공, 수장시공, 단열시공, 지붕시공, 구조물해체, 강구조시공)가 모두 기능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분석, 교육시장 분석 등 기술직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과 부조화됨.
- 즉, 13개 세분류 직종 모두 직업명이 '○○공'으로 끝나는 건설기능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사례는 이와 전혀 무관한 기술인력에 대한 직업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 NCS가 건설인력의 교육훈련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실과 괴리된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직업훈련 교육의 실시는 건설인력의 교육훈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훈련에의 전면적인 적용 이전에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이종한(부장 · ljh@cerik.re.kr)

## 물산업,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

- 건설기업, 물처리시설 등의 시공경험 통해 수익 창출 역량 보유 -

### ■ 건설산업 경영지표 악화

- 2008년 이후 건설산업 경영지표의 많은 부문에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선진국의 경우처럼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확충됨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건설산업의 비중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유지되면서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건설산업 성장성 관련 지표의 악화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였던 PF(Project Financing)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집중된 사업전략은 특히, 상장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과 같은 안정성 관련 경영지표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건설산업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4
매출액증가율	5.4	8.1	13.6	19.6	7.7	3.6	8.1	5.9	2.9	3.2
유동비율	141.1	141.3	144.5	129.0	130.7	133.3	136.6	140.0	138.3	119.9
부채비율	151.4	153.6	159.8	193.1	169.1	145.6	147.1	143.7	147.5	175.8
매출액 영업이익률	5.9	5.8	6.4	5.8	5.2	5.0	4.1	3.2	1.9	1.0
이자보상비율	451.6	438.9	458.7	387.4	294.2	269.4	227.1	212.0	143.7	37.5

주 : 연도별 건설산업 경영지표는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실적신고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대한건설협회가 분석하여 발표한 「2010~13년 결산 건설업 경영분석」을 참조했음. 2014년 3/4분기 경영지표는 2014년 12월 31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4년도 3/4분기 상장건설사 경영분석」을 참조했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 ■ 물산업,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

- 건설산업 경영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15년 4월 대구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산업은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은 어떻게 물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물산업의 성장성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들도 상·하수관거, 물처리시설 등의 시공경험 축적을 통하여 물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20~30년 간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의 57%가 수자원개발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물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음.<sup>1)</sup>
  - 세계적인 물산업 컨설팅기업인 Global Water Intelligence사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13년 5,578억 달러에서 2018년 6,742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아울러 한국 시장은 이 기간 동안 91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로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98%의 상수보급률과 91%의 하수처리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물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공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물산업 진입에 필요한 기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물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이 우선돼야 함.
  - 물산업의 가치사슬에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운영서비스업도 포함됨.
  - 물산업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의 제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일회성 시공이윤 외에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물산업 관련 시설의 운영 서비스 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에서 물산업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건설기업들이 운영 서비스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분절되어 영세 규모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관리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체계 등 국내 물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cerik.re.kr)

1) OECD(2006), “Infrastructure to 2030: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 최근 일본 SOC 시설물 정비 사업 동향<sup>1)</sup>

- 「국토강인화기본법」· 아베노믹스와 연계한 SOC 시설물의 안전/성능 제고에 주력 -

### ■ 일본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의 배경 및 의의

- 일본은 기존 9개 사업 분야(도로, 공항, 항만, 하수도, 치수 등)의 SOC 시설물 투자계획을 통합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5년 단위 계획)을 2003년부터 수립하여 운영함.
  - 구 장기계획에 대한 예산 배분 및 획득의 수단, SOC 시설물 간 상호 연계성 미흡, 사업의 집중화 및 효율화 저하, 지자체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의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정량화된 정책적 목표 설정,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정책 차원의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기간별 중점 목표를 수립함.
  - 중점 목표와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사례 : 중점 목표(예 : 대규모 또는 광범위한 재해 위험 저하)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 사업의 현실성 있는 정량화된 목표 제시(예 : 과거 10년 간 침수 피해를 받은 가옥 중 아직 침수 우려가 있는 가옥 수[61,000호(2011년) → 41,000호(2016년) : 약 30% 해소])
  -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심의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방 단위별 중점 정비 방침 수립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시

### ■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내용 및 재검토의 필요성

- 현행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2~16년)이 2012년에 수립된 이후 아래와 같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거대 지진(동일본대지진)과 빈번한 기상재해(집중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전 방재 및 감재를 위한 「국토강인화기본법」을 2013년에 제정
  - 고도 성장기 이후에 정비(건설)한 인프라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비한 일본 정부

1) 본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발주하고 대한토목학회·서울대건설환경중합연구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시설의 안전제고와 성능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및 투자방향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최근 시행한 일본 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재구성해 3회로 게재 예정임. 본고는 지난 500호에 이어 2회차임.

의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2013년)과 국토교통성의 인프라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2014년)이 수립 · 운영됨.

- 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의 피폐<sup>2)</sup>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집중’과 ‘네트워크’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국토 대규모 계획(Grand Design)’을 2014년에 수립
- 국가 사업인 2020년 도쿄올림픽 지원과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서 사회자본 정비의 추진이 필요
- 따라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급증하는 유지 · 보수 비용의 평준화를 고려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현장 담당자 및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 육성 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포함시켜 규정화

## ■ 일본 고베시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시행과 시사점

- 일본 고베시 도로부는 교량, 터널, 도로 지하동공 등 3개 도로 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정 5년 주기의 점검 및 보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 중앙정부가 소요 예산의 55%를 지자체에 지원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함.
  - 고베시의 2,150개 교량 중 50년 경과 교량은 현재 15%이나, 20년 후에는 65%로 급격한 시설물 노후화가 예상되므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평준화에 주력
  - 약 430km 도로의 지하동공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발생 원인의 80%는 집중호우시 하천 부근 도로의 원활하지 못한 배수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일본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수립 · 운영사례를 참조해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개별 시설물의 기본계획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국토교통SOC정비중점계획(가칭)’을 수립하되 정부의 안전 예산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량화된 목표 설정 및 평가, SOC 시설물 간 상호 연계성, 지자체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erik.re.kr) / 김원태(연구위원 · wtkim@cerik.re.kr)

2) 일본 지방의 60% 이상 지역이 2050년에 해당 지역 인구가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높음. 이에 따른 지방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함.

# 1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8.3% 증가

- 공공 35.6% 감소, 민간 65.5% 증가, 지방 실적 호조 -

## ■ 전년 동월 대비 28.3% 증가, 3개월 만에 반등

- 2015년 1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호조로 전년 동월비 28.3% 증가함.
  - 건설수주는 지난 2014년 11월과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5%, 4.1% 감소하여 부진하였으나, 올 1월 들어 28.3% 증가하여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함.
  - 1월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7조 920억원을 기록해 금액상으로도 양호함.

## ■ 공공 부문 35.6% 감소, 민간 부문 65.5% 증가

- 공공수주는 비주택 건축을 제외한 모든 공종이 부진하여 1월 실적으로는 3년 내 최저치인 1조 3,10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5.6% 감소함.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8.7% 감소해 부진하였으며, 공공 주택수주도 1월 실적으로는 10년 내 최저치인 39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함.
  - 다만,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해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민간수주는 건축 공종이 호조를 보여 1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5조 7,817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5.5% 증가함.
  - 토목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55.8% 감소해 부진한 반면, 건축수주가 79.2% 증가함.
  - 주택수주의 경우 신규 주택과 재건축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1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3조 8,297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9.8% 증가함.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 또한 1조 7,949억원으로 양호해 141.9% 증가함.

<2015년 1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 1월	5,527.6	2,033.7	1,802.2	231.4	72.3	159.1	3,493.9	355.8	3,138.0	2,396.0	742.1
2015. 1월	7,092.0	1,310.3	1,104.8	205.4	39.3	166.2	5,781.7	157.1	5,624.6	3,829.7	1,794.9
증감률	28.3	-35.6	-38.7	-11.2	-45.7	4.4	65.5	-55.8	79.2	59.8	141.9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건축은 모든 공종이 증가, 토목은 도로와 조경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

- 건축의 경우 모든 공종이 양호했는데, 특히 사무실 및 점포와 주택수주가 1월 실적으로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1.1%, 56.7% 증가함.
  -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수주도 각각 186.4%, 59.4% 증가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수주와 조경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함.
  - 도로 및 교량수주는 지난해 1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하였으며, 조경 공사는 위례신도시 관련 사업의 영향으로 452.9% 급등
  - 반면, 철도 및 궤도와 토지조성은 각각 67.2%, 40.3% 감소해 부진했으며, 발전 및 송전과 기계설치 또한 각각 54.7%, 26.1% 감소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조경 공사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5. 1월	3,869.0	1,155.4	378.8	290.0	136.9	265.4	425.9	114.6	80.0	56.4	149.9
증감률	56.7	131.1	186.4	59.4	57.3	35.9	-67.2	452.9	-40.3	-54.7	-26.1

자료 : 통계청

■ 지방에서 호조, 대전·세종시·경남 등에서 2배 이상 증가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0%, 46.7% 증가함. 전체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증가가 두드러짐.
  - 수도권의 경우 건축이 전년 동월 대비 65.9% 증가해 매우 양호했음. 그러나, 토목이 74.5%나 감소해 수도권의 전체 수주 증가는 4.0%에 불과하였음.
  - 지방은 46.7%나 증가해 상승폭이 컸는데, 세부적으로 대전과 세종시, 경상남도과 강원도에서의 수주가 작년 1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지방 공종별 1월 건설수주 비교>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전체			건축			토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수주액	7,092.0	2,480.8	4,611.2	5,830.0	2,213.3	3,616.7	1,262.0	267.5	994.5
증감률	28.3	4.0	46.7	73.0	65.9	77.7	-41.5	-74.5	-10.2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9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삶의 질 보장 분과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아젠다 발굴 회의</li> </ul>
3. 10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사기획 ‘창’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인터뷰</li> <li>-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관련 인터뷰</li> </ul>
3. 13	국회 박현수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지정 토론자로 참여</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담당관실 주최,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개선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li> <li>- 건설업 외국인력 현황 및 문제점 등 논의</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정책관실 주최, ‘제2회 통일주택포럼’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토론자로 참여</li> </ul>
3. 12	뉴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 건설산업연구실 김영덕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li> <li>- 주제 : 기업과 발주기관의 담합 예방 대책</li> </ul>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2차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5. 4. 7(화)~9(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대상 : 관련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미래 한국 건설산업의 선택! 성장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기념식 일시 및 장소 : 2015. 3. 19(목) 오전11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2015. 3. 19(목) 오후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2030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이홍일 연구위원)
  - 제2주제 : 첨단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활용전략(최석인 연구위원)
  - 제3주제 : 미래 건설산업의 제도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최민수 연구위원)
  - 제4주제 : 건설 환경 변화에 맞춘 건설기업 혁신전략(김영덕 연구위원)

## 민자사업 활성화, 두 가지 전제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국과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 소비와 투자심리 부진, 저물가 지속 등에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일석삼조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사업은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로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1994년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643개의 사업에 총 투자비 98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도로, 철도, 항만, 학교, 하수관거, 문화관광,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2007년에는 120개 사업에 1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있었지만 2013년에는 13개 사업에 4조 4,000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도 민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는 원활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 임대형(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아동복지시설, 공공청사,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는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었고 건설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등 민자사업의 사업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민자사업은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은 장기 투자사업이므로 정책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장기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시장성은 국민, 민간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금융조달이 가능해진다.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거나 국회 협조가 미흡해 국가가 민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적 신뢰감이 저하되었고, 시장성이 낮아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 확보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의 투자심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묘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5. 2. 17>

박용석(기획조정실장 · yspark@cerik.re.kr)